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4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6일 (음력 12월 21일) 화요일

세월호 선체 직립 오는 20일부터 본격 추진

부두 끝으로 평행 이동 뒤 철제빔 설치

5월 말께 대형크레인으로 직립시킬 듯

목포신항만에 왼쪽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에 따르면 선조위와 직립 용역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은 6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목포신항만에서 종교 단체와 함께 '선체 직립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연다.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19일까지 배 주위 적치물을 이동시킨 뒤 선체 중량을 측정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세월호 선체를 부두 쪽으로 평행 이동시킬 계획이다. 부두 끝으로 선체를 최대한 붙인 뒤 안전 보강 작업을 벌인다.

이후 5월까지 'L자 형태'로 선체 측면 33곳에 철제 수직 빔(beam)을 보강 설치하고 1만t급 해상크레인을 이용, 일으켜 세울 방침이다.

4월 10일부터 선체 하부를 받치고 있는 수평 빔과 나란히 수직빔이 설치되며, 수평 빔 33개 중 일부가 연장된다. 직립용 받침대도 마련된다.

선체를 육상에 놔둔 채 해상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직립시키는 공법이다.

이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14일까지 선체 직립을 마칠 예정이다. 직립 작업 도중 안전통로에서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병행된다. 해상크레인과 빔을 연결한 뒤 선체를 들어 올리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직립에는 176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직립 시 필요한 기상 조건은 '풍속 8.0m/s, 파고 0.5m, 조류 0.3m/s 이하'로 선조위는 보고 있다.

선조위는 기관 구역 정밀 조사, 참사 원인 다각도 검증, 선체 처리 방안의 다양성 확보, 조사관들 안전 확보,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을 위해 선체 직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작업을 추진한다.

선조위는 선체 직립을 마치는 대로 타기실, 엔진룸, 스테빌라이져 등지에 결함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 외부 충돌설이 제기된 만큼 좌현의 외판 상태를 살피고, 침몰 당시 평형수 배출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기관실 밑바닥에 있는 탱크에서 평형수가 배출되려면 밸브를 열어야 한다. 이에 침몰할 당시 밸브 조작 상태를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선조위 관계자는 "내부 구조물 자체 하중으로 무너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안전 보강 작업이 면밀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L자 빔'을 설치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체 훼손이 없도록 직립 방법을 세심히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민주평화당 오늘 창당…15명 집단 탈당

"실질적 가부결정권 정당 · 선도정당…국민 행복 위해 열심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해 민주평화당 창당을 앞둔 의원 15명이 5일 집단 탈당했다. 〈관련기사 3면〉

민평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준위로서의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창준위 대표를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은 "5일부터 우리 의원들이 탈당을 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미 했고 오늘은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지원, 박준영,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등 15명(이 탈당할 예정)"이라며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비례대표이고 안철수 대표가 출당을 거부해서 아쉽게도 탈당계를 못 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내일 민주평화당을 창당한다"며 "비생산적 양당체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꾸는 정당, 집권 정당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사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다. 실질적인 가부결정권 정당이 된 만큼, 선도정당인 만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자"고 포부를 다졌다.

조 의원은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당명을 미래당이라고 정했다고 한다. 축하한다"면서도 "미래로 가고자 하니 과거부터 깔끔히 정리하고 가라. 헌법기관인 비례대표를 당의 자산이라면서 볼모로 잡는 인질극 정치는 그만둬라.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미래를 당명으로 쓴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국미래연합, 친박계가 탈당해 만든 미래희망연대, 극우 논객 지만원이 만든 시스템 미래당, 우익 정당인 한반도 미래정당 등이 있다"며 "공교롭게도 미래 당명 정당은 죄다 극우보수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자유한국당 계열이다. 당명에서부터 한국당 2중대 자임하는 것 아닌가"라고 더했다.

민평당 창당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통합신당인 '미래당'과 안철수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갔다.

천정배 전 대표는 "창당 이후 그해 4월 총선까지 국민의당은 참으로 많은 국민적 기대를 받았고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얻었다. 국민이 그동안 기득권, 패권, 극한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서 이제 보다 합리적이고 상생을 열어가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줬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 오늘까지를 돌이켜보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다. 못 미친 정도가 아니다. 당을 만든 이후에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대선 후 9개월, 새로운 정치질서가 마무리되고 있다. 안 대표의 돌발행보로 연초 큰 풍파가 일었지만 결국은 균형의 정치상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소위 보수, 진보로 정치세력을 구분한다면 보수 대 진보가 반반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다. 힘의 균형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발이 묶인 장정숙 의원은 "대변인인 제가 법적으로는 미래당 소속이 됐다. 말도 안되는 황당한 사태"라며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된 우리 비례대표들은 안철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하나. 가치, 철학, 노선, 소신이 전혀 다른 안철수에게 볼모로 잡힌 비례들을 억지로 미래당으로 끌고가려는 것을 당장 중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Photo 漫評

기대난

더불어민주당이 1일 헌법 전문에 5 · 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생명권 · 안전권 신설 등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고 행정수도 조항을 넣는 한편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국가의 투기 억제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지방분권 · 자치권 확대 개헌 의지를 강조하면서 여권발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기본권 · 국가 의무 확대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현행)헌법 130조 중 900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다"면서 헌법 전문부터 130조까지 개정키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 · 18,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을 명시하기로 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시스

추미애

홍준표

추미애